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3호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관급공사의 발주 주체를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표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더 많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관급공사의 발주 주체를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근로계약과 표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개정함(안 제6조제2호).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42-600-5324, FAX 042-600-5029, E-mail : jsjyga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계약 체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제6조제2호 중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u>대전광역시</u> 2.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u>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 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u>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조의2(계약 체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 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근로 기 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 <u>「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u>
제6조(서류제출) (생략) 1. (생략) 2. <u>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u> 3. (생략)	제6조(서류제출) (생략) 1. (생략) 2. <u>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u> 3. (생략)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